공식반응 삼간채 심야·새벽 회의에 NSC 소집 '긴박'

공무원 北 피격 사망에 청와대 당혹

민감성 고려 신중한 태도 유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악영향 우려

제2의 박왕자 사건 번질 땐

文정부 내 남북관계 개선 물 건너가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 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24일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23일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부처 관계자들이 전날 심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이른 오전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평소 목요일 오후 3~4시께 열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앞당겨 이날 정오에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런 긴박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해 공식 반응을 삼가는 등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나 경위 등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총격을 한 곳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도중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완전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강력 규탄…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국민의 생명은 뒷전"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살해된 것으로 24일 밝혀지자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체포한지 6시간 10분 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텐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다. 북측은 이에 따른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은 박왕자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면서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바다에 떠있는 사람을 총살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며 "김정은이 장성택을 참수해 당 간부들에게 전시했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고 북한을 성토했다.

탈북자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7조 8000억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원 중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 등 9천억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시, 시의회·5개 자치구 간담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긴밀 논의키로

구간 경계 조정·공항 이전 공동 대응

이용섭 광주시장이 꺼내든 '광주·전남 행정 통합' 이슈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은 24일 광주에서 이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의장단에게 행정통합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행정부시장 중심의 준비단을 구성해 실무 추진 체계를 갖추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전남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 행정 통합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구성하는 실무 추진단에는 들어가지 않는 대신 전남도의회와 별도 논의 기구를 꾸려 문제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다만 이날 광주시가 최근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마련, 민간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단은 또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군 공항과 별도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의회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구간 경계 조정 문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집 의장은 "집행부(광주시)와 의회가 그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의와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광주 5개 구청장과 만나 행정 통합, 구간 경계 조정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이 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5개 구청장들은 앞으로도 광주시와 함께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역 각계를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